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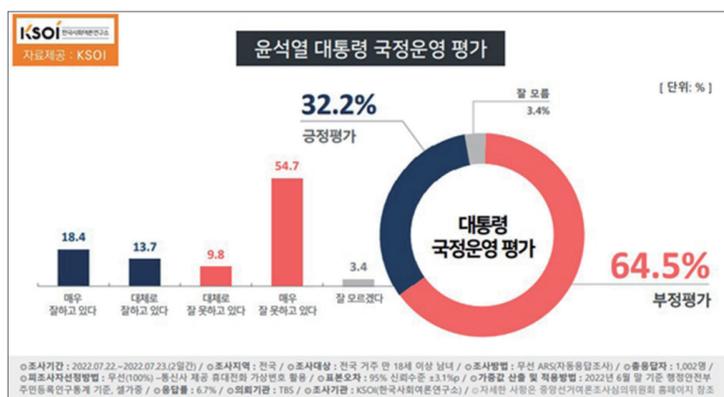
尹, 경찰 집단행동에 “행안부·경찰청서 필요한 조치 할 것”

총경급 사장회의 이어 경감·경위급 팀장회의 움직임 “장관들 대정부 질문서 국민 납득할 설명할 것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경찰국 신설을 놓고 총경에 이어 중간 간부들도 집단행동을 예고 중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경감, 경위 등이 참석하는 팀장급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등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들이 어떤 답을 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한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 32.2% · 부정 64.5%

긍·부정 격차 전주보다 0.6%p 늘어 32.3%p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32.2%, 부정 평가 64.5%였다.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2%포인트 늘었으나 부정 평가 또한 0.8%포인트 늘면서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31.7%포인트에서 32.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 18.4%, ‘다름대로 잘하고 있다’ 13.7%, ‘다름대로 잘 못하고 있다’ 9.8%,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4.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0대(77.6%) ▲광주·전라(84.2%) ▲진보 성향층(93.3%) ▲더불어민주

당 지지층(94.6%)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 상승 폭은 ▲30대(69.5%→78.9%, 9.4%포인트) ▲대전·세종·충청(57.7%→62.4%, 4.7%포인트) ▲학생(58.8%→69.1%, 10.3%포인트) 등에서 컸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이틀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다. 2022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오유나기자

與, ‘경찰 반발’에 “배부른 밥투정·집단 이기주의” 맹공

“선택적 분노·정치 규합, 반드시 책임 뒤따를 것”



국민의힘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한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배부른 밥투정” “집단 이기주의” “선택적 분노”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로 삼아 집단 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

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불모로 한 정

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 된다. 더욱이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경찰이 집단 행동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라며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란 그 한명만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당연히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특권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부 일원이고 헌법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이 벌어질 것”이라며 “경찰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한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겠냐”고 주장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간부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라며 “치안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다. 경찰 독립을 외치는데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건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 | |
|-------------------------------|-------------------------------|
| 기사제보 (062) 222-2580 |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